46호, 2004, 02-3

01 평화누리

02 (책을 열며) 물방울들의 힘과 민족공조 - 문규현

03 (특집 1) 6자회담 결과를 보고 - 이재봉

04 (특집 2) 각 정당은 얼마나 자주평화통일 지향적인가? - 강정구

05 (설문조사) 제17대 총선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06 (시론) 부시정권의 예방적 선제공격론의 국제법적 위법성 - 최철영

07 (현장인터뷰) 스토리사격장 불법 증설공사 현장

08 (발언 1)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의 해결 방안 - 천준호

09 (발언 2)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을 보며 - 표명렬

10 (독자와 함께) 너무 어렵고 글이 많아요 - 손윤희

11 (세계평화군축운동 동향)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홍근수

12 (회원탐방) 김포농민회장 최병종 회원

13 (회원글)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 대한 실형 선고의 의미 - 공동길
사무실에서 - 이경아

14 (평화카페) 태극기 휘날리며

15 (세상속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아저씨밴드 윤밴 - 최경순

16 포토뉴스

17 (자료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책을 열며◆

물방울들의 힘과 민족공조

평통사 상임대표 문 규 현

이런저런 이유로 글쓰기를 미루는 사이 평통사 사무실 보일러가 동파되어 애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 연휴 강추위에 여기저기서 그런 사태가 났지만, 평통사 식구들마저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사무실 돌보느라 고초를 겪었으니 딱했습니다. 그나마 저도 따뜻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은 않았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이곳 부안 반핵민주광장에서 매일 밤 촛불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2월 14일의 부안 주민투표를 앞두고 모든 주민 집회가 중지되었으나 반핵민주광장 앞에서 둘 셋 성직자들의 촛불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발에 금방 눈사람이 되어버리고 매서운 바람에 얼어붙는 몸은 정말 어떻게 할 도리 없이 힘들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꺾을 수 없고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 괜찮은 일입니다.

야만스럽다. 미국을 표현하는 말을 단 하나만 대라면 저는 단연코 이 단어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곳 부안에서도 미국의 그림자를 보고 미국의 야만성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의 핵산업계와 핵재처리 계획과 관련된 그 무엇이 있으니 정부가 이렇게 악착같이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미국의 그 야만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족의 분단은 그 야만성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야만성은 민족주체성의 혼을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식민통치 하는 것입니다. 한미공조가 언제나 민족공조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은 적이요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고, 미국의 패권과 힘을 섬기고 추종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해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족공조. 남북한 간 민족공조는 그것을 열망하는 국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내면의 식민상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보다 미국이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니 정말 놀랍고도 흐뭇한 일입니다. 평통사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다시금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해 가려는 평택 팽성읍의 주민들은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면 부안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부안이 언급되는 것에도 데인 듯 아프고, 팽성읍 주민들이 미군 때문에 고스란히 지고 다니는 야만의 세월에도 가슴팍이 쑤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전에도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뒤 피눈물나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또 다시 쫓아낸다면 죽기 살기로 반대할 것이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계속 강요한다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농사꾼이 논밭을 빼앗기고 쫓겨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부안 군민도 팽성 읍민도 이제 더 이상 하라는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시늉이라도 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이라면 그저 흠모와 숭배의 마음으로 떠받들던 그런 국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두터운 식민지 먼지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치른 무슨 이벤트 성 행사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길고 긴 세월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라도 열어두면 수도관이 얼지 않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부딪고 또 부딪히면 마침내 얼음벽도 뚫습니다. 그 무슨 힘의 논리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권과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물방울들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얼음물을 녹이고 또 녹이면 강물도 이루고 바다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평통사 회원들이 국민들 마음을 적시고 또 적시는 그런 물방울들이 되어, 그 힘으로 미국의 패권정책에 맞서고 남북 민족공조를 튼튼하게 받쳐줄 거대한 국민적 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특 집 I ◆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남한의 대미 자주에 달려있다

이 재 봉
원광대학교 정치학평화학 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대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제 2차 6자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몹시 크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배짱이나 미국의 오기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며 협상에 유연성이 없다는 의혹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부분도 몇 가지 보인다. 첫째,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선언한 것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없애거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과 다름없다. 둘째, 평화적 해결과 평화적 공존을 다짐했다니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셋째, 6월경에 제 3차 6자회담을 열기로 하고 그 준비를 위한 실무자 모임을 자주 갖기로 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의견 차이가 커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큰 쟁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말썽이 될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요즘 언론에 고농축 우라늄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니 먼저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핵무기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우라늄폭탄과 플루토늄폭탄으로 나뉘고, 폭발 방법에 따라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으로 나뉜다.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독성이 적고 핵무기로 만들기 쉬우며 제작 과정에서 감추기도 쉽다고 한다. 천연 돌덩어리 우라늄은 U-235라는 핵을 분열시키는 물질을 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을 적어도 90% 이상 지닐 수 있도록 우라늄을 잔뜩 쥐어짜놓은 게 고농축 우라늄 (HEU: Highly Enriched Uranium)이다.

참고로 미국은 1945년까지 1개의 우라늄폭탄과 2개의 플루토늄폭탄을 만들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우라늄폭탄이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터뜨린 게 플루토늄폭탄이었다. 플루토늄폭탄은 디자인이 복잡해서 시험용으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라늄폭탄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파키스탄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의 자수를 강요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게 추악한 음모를 꾸미지 말라며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투다.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은 제 2의 금창리가 될지도 모르고 북한이 앞으로 쓸 비장의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1998년 미국이 의혹을 제기했던 금창리 지하 시설이 결국 텅빈 구덩이로 판명되었듯이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무기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있다면 얼마나 진전이 됐든, 또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얼마나 있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리비아처럼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면 선의를 베풀 수 있다며 회유도 하고 압력도 넣어보지만, 리비아와 북한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 더 잘 안다. 리비아는 군사력이 몹시 약해서 미국의 협박에 쉽게 굴복했을지라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여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협박에 버틸 수 있다. 이라크가 침략 당하는 것을 보고 리비아는 무장 해제를 선택했지만 북한은 무장 강화를 선택하는 셈이다. 이른바 이라크 효과가 리비아와 북한에서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의 침략을 당했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것 같아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더러 무조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리비아식 해결 방안이란 그야말로 턱도 없는 발상이 아닐까.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시하고 내버려두자니 미국이 공들여 지켜온 핵확산 금지 조약(NPT)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핵무기를 통한 미국의 세계 지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경제 봉쇄를 하여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원하는 바일텐데, 중국이 대북 지원을 멈추지 않는 한 북한 붕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침략을 하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적지 않게 죽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침략 전쟁을 산뜻하게 처리했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 침략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결국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문제를 속시원하게 풀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요구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이 자꾸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으니, 서로 먼저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핵프로그램은 무기를 만들기 전에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니 대체 전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간단하고 합리적인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주장해왔듯, 나는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본이나 남한에 떠넘기면 되니까. 그러나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거나 철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군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구실로 남한에 머무르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약속을 맺으면 주한미군의 명목상 존재 이유가 없어져버려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요 북한을 깡패 국가

로 낙인찍어야 하는 배경이다.

이렇듯 북한 핵문제의 열쇠는 바로 주한미군에 있다. 미군이 남한에서 떠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 조약을 맺는 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근처의 병력도 뒤로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남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한 국민의 힘과 의지다.

미국이 먼저 원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는 않을 테니,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주체는 바로 남한의 시민 세력이다는 말이다. 미국이 아무리 무력과 오기를 앞세우는 나라라 할지라도 남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미군이 떠나기를 바란다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걸고 외세에 저항하며 독립을 추구했던 숭고한 3.1절에까지 서울의 한복판에 수만 명이 모여 성조기를 흔들며 사대종속을 지속적으로 외치는 한심하고 얼빠진 현실을 감안하면 꿈같은 얘기다. 우리가 진정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이 더 활발해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민족자주 의식과 독립 정신을 어떻게 길러야 할 지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 집Ⅱ◆

각 정당은 얼마나 자주평화통일 지향적인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평통사 지도위원) 강 정 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지역분열주의, 색깔론, 연고주의, 금권주의 등의 고질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역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역사구도를 조망하고 이에 걸 맞는 역사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면서 국민을 동참케 하는 지도력을 갖춘 정당이나 인물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직면한 당면현안과 장기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앞서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현안과 과제들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 통일기반 조성, 정치민주주의 차원을 뛰어넘어 일상생활 영역에로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공고화, 민중의 정치세력화,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실현, 한미관계의 재편과 주한미군의 위상 재조정,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평화체제의 추구,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독재의 개혁과 극복, 부정부패에 오염된 정치권과 경제권의 정화, 박정희 독재에서 비롯된 망국적인 지역주의 근절, 민족자주의 구현, 자연생태계와 인간생활과의 조화로운 결합 등이 중요 현안과 과제일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과 직결된 평화, 민족의 미래 역사를 규정할 통일과 자주 영역에 국한하여 각 정당을 자리 매김 해보겠다. 이러한 자리 매김이 총선에서 정당이나 인물의 선택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별 자리 매김은 이 영역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강이나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이 정책들이 단순히 선거용인지, 이를 권력행사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이 후보자나 그 주위의 핵심세력이 가지고 있는지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과거의 민족사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확립, 민족통일 기반조성, 민중권익을 위한 실천 등)주체였는지, 아니면 방관자나 냉소자였는지, 또는 이를 가로막는 원흉이나 공범 및 하수인이었는지 등도 자리 매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화-통일-자주의 각 소 영역별로 당면 현안과 장기적 과제를 세분화 해 보겠다. 물론 이 세부 현안과 과제는 서로 겹치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분석 목적을 위해서 분류한다. 첫째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권과 직결된 평화영역에 대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평화영역의 당면과제는 북핵문제, 국방비 증액, 군축,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미군기지 이전, 동북아평화협력체 등이다. 둘째, 통일 영역에서는 남북공조, 통일방안, 통일 후 사회경제체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 反통일법인 국가보안법 등이다. 셋째, 자주영역에서는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 평택기지 이전 등이다.

이제 이들 세부 사안을 기준으로 각 정당별로 평가해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세부 안건별로 규범이 제시되고 각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이 이 규범에 얼마나 가까운 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각 정당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의 평통사 도표에 의거한다. 이 도표가 포괄하지 않는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유보한다.

평화영역에 대한 세부평가를 하겠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핵폐기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동시이행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성이다. 민노당은 동시이행과 일괄타결을, 열린당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미공조와 일방적 북의 핵포기를 제시해 가장 반동적이다. 자민련 역시 일방적 핵폐기만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다음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민노당을 빼고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이 대북 과잉전쟁억지력 수준이고 노정권의 자주국방이 미국의 동북아패권과 연동되어 동북아평화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이는 평화지향이라 할 수 없다. 군축 역시 민노당만이 안을 제시하고 있고 자민련은 북한주적과 안보강화를 내걸고 있어 과거의 냉전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서 핵심은 남-북-미국 사이의 평화협정(북-미간)이나 평화선언(남-북간)과 동북아평화협력체의 추진이다. 민노당을 뺀 다른 정당은 3자간의 평화협정을 외면하고 있고 모든 정당들은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구도의 정착화를 모색하는 장기적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열린당과 민노당이 지역안보체제를 내걸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평가는 자주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종합하면 각 정당의 평화영역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 평화구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고, 실질적인 평화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적실성이나 이상성이 결여된 수준이다. 이는 군사문제가 이제까지 성역으로 정당의 당면과제로 인식되지 못해 왔고, 특히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자주적이지 못한 정당에게 자주적인 평화정책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단지 주한미군 철군과 핵무기 완전철거 등을 주장하는 민노당만이 예외적으로 평화지향성이 뚜렷하고 열린당이 조심스럽게나마 초보적 수준의 평화정책 기조를 띠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은 통일영역 평가이다. 우선 통일 후 사회경제체제가 통일에 대한 시금석이기에 이를 먼저 검토하겠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통일 후 사회경제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정시키는 것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아니면 통일정책 부재 또는 反통일로 해석돼야 한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가장 反통일적이다. 민주당과 열린당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통일에 대한 사려 깊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부분으로 수용하고 있어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이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결합시킨 방식의 통일방안 원칙을 합의했음에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부 수준에서 힘든다 하더라도 정당차원에서 이를 진척시켜야 할 과제를 띠고 있지만 민노당만 소극적 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통일방안은 연방제라는 과도기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현실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명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연방제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황당무계한 공안 잣대의 망령에서 정당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당은 개정을, 민노당은 폐지를 내걸고 있어 이 분야 역시 민노당이 통일 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 남북공조는 한미동맹의 기조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열린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현존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야당은 모두 현존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이를 남북공조에 우선하고 있다. 민노당은 분명히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선할 것을 내걸고 있어 남북공조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종합한다면 통일영역 역시 민노당이 가장 통일 지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열린당이 다른 기성 정당보다 약간의 통일지향성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영역을 보자. 이들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 모두는 자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핵심요소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자주 영역의 장-단기적 역사행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으로부터 얼마나 자주성을 견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파병에 자민련은 파병지지로 가장 숭미적이고 한나라당과 열린당은 파병안 처리에 동의한다는 친미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 권고적 반대를 보이고 있어 이색적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자체가 대미자주 지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면적인 정파적 이해에 의해 선택된 당론이지 민주당의 기조에 바탕을 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역시 민노당은 처음부터 파병반대를 굳건히 표명하고 민주시민사회의 파병반대운동에 적극적 참여주체가 되었다.

한미동맹이나 군사동맹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 야당은 현존 한미동맹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어 자주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다. 열린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현존의 한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인정하나 새로운 관계 설정에서 민노당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평택기지 이전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외국군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으로 주권침해의 전형이며 민족자주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쳐지는 것이건만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는 전혀 없고 단지 민노당과 민주당이 이전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따름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자주지향성에서도 역시 민노당이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보다 훨씬 뒤쳐져서 열린당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각 정당들이 얼마나 자주-평화-통일 지향적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세 정당은 냉전과 숭미에 매몰된 채 옛날의 껍질을 전혀 벗지 못하고 있다. 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전혀 담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열린당은 이 수구적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단지 민노당만이 시대적 흐름에 호흡을 같이하는 고독한 선두주자이다.

총선에 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정당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판갈이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설문조사◆

제17대 총선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조사 대상 : 평통사 회원
조사 기간 : 2004년 2월 20 ~ 27일
응답 회원 : 92명

1. 오는 4월 15일, 귀하는 제17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① 꼭 투표하겠다(86명, 93.5%) ② 그 때 가봐서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4명, 4.4%)
③ 투표 안 하겠다(1명, 1.1%) ④무응답(1명, 1.1%)

2. 귀하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일부 복수응답)
① 정당(43명, 42.6%) ② 인물(17명, 16.8%) ③ 정책과 공약(40명, 39.6%)
④ 고향이나 학연, 인맥(0명, 0%) ⑤ 기타(1명, 1%)

3.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일부 복수응답)
① 한나라당(0명, 0%) ② 민주당(3명, 3.2%) ③ 열린우리당(4명, 4.3%)
④ 민주노동당(71명, 76.3%) ⑤ 기타정당(2명, 2.2%)
⑥ 지지 정당이 없다(13명, 14%)

4.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6명, 6.5%) ② 들어본 것 같은 데 잘 모르겠다(13명, 14.1%)
③ 조금 알고 있다(43명, 46.7%) ④ 잘 알고 있다(30명, 32.6%)

5. 제17대 총선에 대해 평통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0명, 0%)
② 투표 참여 방침만 결정하고 정당과 후보는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4명, 4.3%)
③ 평통사의 정치적 지향(자주평화통일)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는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69명, 74.2%)
④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을 가지는 것이 좋다(16명, 17.4%)
⑤ 지역조직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2명, 2.2%)
⑥ 기타의견(조직의 단합과 단결에 도움이 되도록. 3번을 체크했는데 평통사 구성원들을 보았을 때 2번으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2명, 2.2%)

◆시 론◆

부시정권의 예방적 선제공격론의 국제법적 위법성

대구대 교수/국제법 최 철 영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선제공격전쟁(preemptive war) 또는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 영역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강요하기 위한 선제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자위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도 다른 국가의 무력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그 보다 확대된 예방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이란 무엇인가?

부시정권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전히 자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 선제적 자위권의 이론적 근거로서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대량살상이 가능한 현대의 첨단무기시스템 하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자위권개념은 국가안보를 담보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첨단의 대량살상무기 시스템 하에서는 일단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으면 반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선제공격론은 9.11 테러 이후 그 배후로 지목된 알 카에다 구성원의 색출과 보복을 빌미로 공공연히 주장되어 왔다. 부시는 미국의 자유와 미국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행동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200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또한 급박한 무력공격위험에 대해서는 자체방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의 개념1)을 무리하게 확대한 예방적 자위권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금지와 자위권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유엔헌장의 무력행사금지조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행규범이며 일반국제관습법의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는 국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유엔헌장의 무력행사금지조항은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의 행사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군사적 강제조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은 과거 국가 자존권 개념2)의 범위를 제한하는 좁은 의미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유엔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제사법법원(ICJ)은 1986년 니카라구아 사건3)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법상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

예방적 자위권은 왜 허용되지 않는가?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방적 자위권은 대규모적인 무력침략이 급박한 경우 그러한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선제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피침략국의 안보능력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 피침략국의 자위권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예방적 자위권의 요건을 긴급하고, 다른 수단의 선택이나 시간적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도덕적 측면에서 상대방 국가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국가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적 자위권개념 조차도 현재의 국제법체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유엔헌장에 의한 자위권행사는 그 전제조건으로 무력침략이 발생한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예방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무력행사가 각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금지원칙의 근본을 붕괴시키는 것이 된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더욱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는 설혹 국제사회가 앞으로 예방적 자위에 근거한 무력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자위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은 상대국이 침략준비를 완료하여 공격개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공격작전이 개시되어 국경을 향해 접근해 오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결정된 핵공격의 위협에 처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침략이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제적 공격론은 예방적 자위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무력 행사를 허용하는 패권적 논리이며, 자국의 국가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는 반평화적 논리일 뿐이다.

1) 유엔 헌장 제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쓰고 있다.

2) 국가자존권은 자위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무력행사의 권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나라가 가뭄을 당하였을 경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력행사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물을 강제로 빼앗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3) 친미보수집단인 니카라구아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한 무장반란을 시도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경우 니카라구아반군의 무력공격 행위는 자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인터뷰◆

스토리사격장 불법 증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난 1월 19일 평통사에서는 불법적인 미군사격장 증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파주 스토리 사격장을 찾아갔다.
파주 스토리사격장은 민통선 안에 위치한 미군전용사격장으로 1973년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미군에게 공여되었다. 파주 장파리 일대 주민들은 미군에게 공여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공여된 후에도 실제 사격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군의 사격장 증설공사와 사격장 전역에 대한 철조망 공사가 시작되어 이곳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어왔던 농토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파주녹색환경모임 우경복 사무처장을 만나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편집자 주-

▶ 미군 스토리 사격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1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군이 공사를 시작하자 5일 파주시에서 조사 나와서 담당계장이 협의를 못 받았다며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미군들은 그냥 강행하고 있다.
12일날 사격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재가 들어와 있었다. 기둥들이 박혀 있고 포크레인이 3~4대 들어와 있었다.

▶ 공사규모는?
스토리사격장 215만평에 대해 공사를 해나가고 있다. 사격장 둘레에 철조망을 갖다 놓고 기둥을 박아 놓았다.

▶ 그동안 스토리 사격장에는 경계가 없었던 건가요?
경계가 없었다.
재작년에 미군들이 일부에 경계공사를 한 적이 있다. 5미터 폭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경계를 표시해 놓았었는데 이로 인해 수십 킬로에 달하는 자연림이 파괴되었다. 그때도 언론에 알려지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복원을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격장 전역에 걸쳐 담장을 치겠다는 것이다.

▶ 담장 설치 외에 사격장 증설공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전차 사격장, 도시형 폭파 사격장, 개인화기 사격장, 이동 사격장, 망대, 회의장, 강의실까지 총 10개의 건물,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

▶ 담장 설치와 사격장 증설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담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들을 사격장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된다.
그리고 담장이 설치되면 동물의 이동통로가 막힌다. 여기는 민통선지역이라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많은데 그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이동통로가 막히면 농작물을 먹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2차 피해가 온다.
또 스토리 사격장 바로 아래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데, 사격장이 증설되면 취수장이 중금속, 화약으로 오염되게 된다. 이 취수장은 20만 파주시민의 식수원이다.

▶ 사격장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있다. 작년까지 농사를 지어 왔는데.
2002년도에 일부 농지는 피탄지라고 하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국방부에서 대토를 마련해 준 적이 있었다. 피탄 지역 말고는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할려면 최소한 생계대책은 해 주어야지.

▶ 담장 안은 모두 미군 공여지인가요?
1973년도에 미군에게 공여될 걸로 알고 있다. 그 때, 정부가 토지소유자 동의도 없이 몰래 공여하였다. 2000년까지도 주민들은 자기 땅이 공여된 줄도 몰랐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국방부에서 종이 한 장으로 사과하고 끝나버렸다.

▶ 파주시는 미군의 사격장 증설 공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시와 협의가 안된 불법공사로 본다. 대규모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안 받았다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복구를 요청했는데도 미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미군의 공사 강행에 대해서 파주시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군들이 그냥 강행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국방부에서는 시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공문을 못 보냈을 뿐이라고 한다. 아니 국방부에서 파주시와 협의를 했다면 왜 파주시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 주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막는 수밖에 없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철조망을 잘라서라도 들어가겠다.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국방부 대미사업부 사람들한테 여러 번 호소를 해도 듣지 않는다.
농사를 짓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동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격장에서 나오는 물은 화약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철조망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

▶ 담장 안에 포함되는 농토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약 90만평 정도 된다.

▶ 2002년 일부 피탄지에 국방부에서 대토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대토는 어디에 조성되어 있나요?
일부에 포 떨어진다며 철조망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대토를 마련해 주었다.
전방에 가면 지뢰 밭도 있고, 개간이 안된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약 10만 평을 2002년 5월까지 조성해 주었다.

▶ 담장 안에 포함되는 90만평에 대해서는 대토 대책도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국방부 대미사업부에 항의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누구는 친자식이고 누구는 의붓자식인가,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1시간 이상 싸웠다.
그런데 대미사업부 관계자는 대토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 그 사람은 이번에 처음 맡아서 아무 것도 모르더라. 그런 자들을 내세워서 뭐하겠다는 건지.

▶ 2000년에도 스토리 사격장에서 주민들이 한참 싸운 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는 어떤 문제였나요?
피탄지와 취수장 오염 문제였다.
그때 미군들이 일부 사격장 농지를 피탄지라고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을 못들어가게 했다.
총으로 위협까지 했지만 주민들이 포크레인과 농기계로 바리케이트를 밀어버리고 들어갔다.
결국에는 대토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타협됐다.
국방부에서 피탄지역에 대토를 마련해 준 것도 주민들이 싸우니까 그런거다.
그리고 사격장 바로 아래에 있는 취수장 오염문제였다.

▶ 취수장 오염상황은 어떤가요
평상시엔 사격장 오염물질이 안 내려온다. 비가 오면 사격장에 고여 있던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 이곳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 다들 지하수를 파서 먹지. 20만 파주시민들은 이걸 모르니까 먹을게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 정리 | 김현진

평통사는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를 막기 위해 1월 19일 장파리 주민들, 녹색연합과 스토리사격장 현장에서 미군의 불법적인 사격장 신설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1◆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의 해결 방안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KYC 서울대표 천 준 호

미국이 덕수궁 터에 15층 규모의 대사관과 8층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 4층 규모의 군인 숙소 신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사실상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고건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덕수궁 터 이외의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사관만 짓고 덕수궁의 일부 전각을 복원하여 현장에 보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의 간접화법을 동원해 신축의 불가피성을 비쳐왔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좀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울시와 외통부 관계자는 덕수궁 터 보존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 모임에 사전예고 없이 찾아가 분명한 어조로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신축을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리에 참석한 문화재위원들 중에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강력히 항의한 사람도 있었고,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중 첫째는, 미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재산 교환양해각서를 통해 미대사관 신축을 조건으로 재산교환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럴 경우 외교문제와 관련한 대외 신인도와 한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냉랭한 한미관계가 이런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국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미측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사관 신축을 위해 협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덕수궁 터는 이미 많이 훼손되었고 주변에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미대사관 신축예정지를 덕수궁 터라는 이유로 보존하자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미측 관계자도 덕수궁 주변의 고층 건물을 봐라. 너희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덕수궁 터에 이미 들어선 건물들을 모두 헐고 복원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물러설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을 탓하기 이전에 덕수궁 주변을 둘러 보라. 개발이란 이름으로 저질러 놓은 난개발의 실상 앞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측과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적 파괴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셋째는, 서울시내에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보았으나 미국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 적당한 대체부지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모임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축예정지가 덕수궁 터라는 사실이다. 문화유적지임이 명백한 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궁궐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두 번째, 미측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재국의 문화유적지를 짓밟고 세운 외교공관을 보며 어느 나라 국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내국인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벌써 보존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을 사안이다.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된 이후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번째, 문화재의 보존 여부는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 보존 논리와 외교와 정치 논리의 충돌로 볼 수 있다. 문화재적 검토는 신축예정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덕수궁 터임이 분명하며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외교정치 논리에 휘말려 문화유적지를 훼손하는 가슴 아픈 선례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 해결의 목표는 문화유적지로서 덕수궁 터를 보존하고, 미측은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아 새로운 대사관을 마련하며, 정부는 문화유적지와 그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의 전제가 지켜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확신한다.

하나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이란 것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월 중에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가 열리면 이번 사안을 심의하게 되고 보존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문화재위원회는 그런 원칙에 따라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면 된다. 그러나 부당하고 편파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자행되는 압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체부지 수용이다.
덕수궁 터와 같은 부지를 그것도 사대문 안에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를 옮긴다면 모를까, 이 역시 재학생 학부모의 동의 등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덕수궁 터와 똑같은 비슷한 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보면 답은 많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이런 안을 수용한다면 서울 사대문 안에 미국이 원하는 면적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미측 입장에서는 주재국의 문화재보존을 위해 신축계획을 변경하면서 양보했다는 명분과 빠른 시일 내에 유용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는 정부가 과거에 덕수궁 터를 미측에 내어 준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이 문제를 대응하는 한미 당국자들에 의해 악화되었다. 신축될 미대사관이 미측의 주장대로 양국간 우정의 상징물이 될지 아니면 왜곡된 한미관계의 상징물이 될 지는 덕수궁 터의 보존여부와 문제 해결 과정이 말해 줄 것이다. 문화재보존과 상호존중의 양국관계를 위해 과거 잘 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맞추려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발언2◆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을 보며

예비역 준장. 군사평론가 표 명 렬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한창일 때, 일제 치하에서 천황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 일에 핏발 세워 독려했던 반민족적 수구족벌 신문과 극우 기득권 세력들은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그때 모습 그대로, 맹방인 미국을 위해 국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해댔다.

조국 광복 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 청산되었어야 할 이들 친일분자들이 이승만의 정치적 야욕과 미군정의 필요에 따른 비호아래 오히려 나라의 요직을 두루 석권해 버림으로써 그들의 자제들은 월등히 많이 배우고 엄청난 부를 쌓아 기득권의 대를 이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세대가 하던 그대로 시대 조류에 영악하게 영합, 강한 나라에 빌붙고 강한 저들끼리 뭉쳐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사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여망을 집요하게 짓뭉개 왔다.

국가외교는 자주적 민족의식이 실종되어 버려 국민들이 아무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도 마이동풍 코웃음치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려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익인데 못난 국민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탓하며 그들의 입맛을 찾고 쫓는 것이 능력인양 착각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진정한 뜻과는 동떨어져, 예의 친일 앞잡이 신문이 나팔불고 차떼기 도둑들이 북 치는 장단에 맞춰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왔음이 지금까지 정부의 파병결정 과정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다. 국가적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평화의식은 내팽개쳐져 맹방과 국익 만이 판을 쳐왔다.

이라크 전은 분명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파병 여부는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치 외교상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군이 주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군대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시행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군 출신 원로라는 분들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불러 국방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투부대 파병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고 호된 질책을 했고 수구 족벌 신문은 이런 국방장관은 갈아 치워야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분위기에 겁을 먹었던지 현역 장군이 군복을 입고 언론에 자주 나타나 단호한 표정으로 전투부대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용감한(?) 현역 대령은 파병 반대 의견을 주

장해온 본인에게 반 협박성의 편지를 보내는 등 군인 신분으로서 정도를 벗어난 가당치 않은 행위들을 했다.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선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군인 자격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중요하게 포함된다. 후배 간부들이 이런 극히 상식적인 원칙도 몰랐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민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고급간부들의 이런 모습은 이강철 이등병의 이라크 파병 반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다. 나는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 적극 반대론자다.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자주 반대 의견을 발표해왔고 시청 앞 광장 집회에 나가 열띤 연설도 했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군복을 입고 파병반대를 외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군대는 군률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 사병이건 장군이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군인 신분을 내세운 공식적 주장은 엄연한 군율 위배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정을 보면서 우리 군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 분들의 직,간접적인 간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식민분자들과 독재옹호 세력에 의해 잘못 형성된 우리의 군대문화를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비전을 가진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 거듭나도록 개혁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독자와 함께◆

너무 어렵고 글이 많아요…

서울평통사 여성분회 손 윤 희

회지를 기획하고 편집,완성하시는 실무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조금 더 회원 모두에게 공감되는 회지, 일상적으로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회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 봅니다.

먼저 회지의 대상과 성격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회지란 학술적이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생기고요.
특집이 매 회지마다 너무 많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인 많다 보니 글씨는 많고 여백이 없어 답답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썼으면 합니다.
또한 요점 정리, 비교 분석, 도표 등을 통해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회원에게도 회지가 오는데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후원회원에 따라 사안별 1장짜리 만화와 내용이 압축된 찌라시 정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1월 회지의 회원 탐방은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지에 이 시대를 운동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 또는 역사적 인물도 실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실천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교훈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별, 사안별 기획은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세계평화군축운동 동향◆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평통사 상임대표 홍 근 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지난 1월 16일부터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열렸던 제4회 세계 사회포럼은 1월 21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주 행사를 거행한 곳은 옛날 공장 지대를 임시로 개조하여 세미나실과 워크샵 장소 등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한 아주 넓은 공간이었다.
해외에서는 약 1만 명이 참가했고 나머지는 인도에서 참가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등록인원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국민행동(KoPA)의 깃발 아래 다함께. 민주노총 등 약 300 여명이 대거 참가하여 우리나라 엔지오의 열의를 입증하였다. 이는 주최국인 인도와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참석한 것이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이 간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한국 민간인들의 지도력을 실제로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17일날 밤의 전체 모임에서 나는 군사주의, 전쟁, 그리고 평화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노천에서 벌어진 이 강연에서 나는 2차대전의 전범국도 아니고 다만 전범국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 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 한쪽인 남한이 반세기 이상 미국에 예속되어 온 역사, 두 여중생을 죽인 미군들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진 사실과 이라크 파병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의 미국 역사가 기반하고 있는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특히 노동자대회 때에는 약 1만 명 정도가 홀에 모였는데 대부분이 인도 노동자들이었던 것 같다. 이날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국회부의장, 스위덴의 장관 등이 축사를 할 만큼 노동자들의 정치력을 과시하였다.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였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부시 낙선운동을 계획하고 영자로 Defeat Bush Network의 이름으로 신문까지 준비하여 첫 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음날 워크샵에서도 나누어주었다. 조 교수는 1월 17일 오후에 있었던 워크샵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토론한 결과 결국 다른 미국은 가능하다는 이름으로 바꾸고 부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다. 이 운동에 호주, 이태리, 필리핀, 터키, 한국 등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몇 차례 소모임도 가졌다.

그 외 한국인들 가운데는 미국의 군사주의,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평화 워크샵에서 사회를 본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FTA, WTO 반대 국민행동의 정책기획팀장인 류미경 양, 전소희 양, 역시 사회진보연대의 김소희 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김정랑 씨 등 많은 분들이 워크샵의 사회자로, 발표자 등으로 맹활약하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서명과 거리 시위, 그리고 다함께 청년들이 주축을 이룬 반전평화 시위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자는 매일 같은 길거리에서 진행하였고 후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씩 큰 시위를 하였는데 외국인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번 4회 world social forum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한-일 간 공동행사로서 이라크 전쟁반대 시위였다. 한국 측에서는 내가, 일본 측에서는 겐주 와다나배상이 각각 전쟁반대 연설을 하였다. 비록 통역을 두고 하였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이웃 나라들, 특히 한, 일 양국이 공동시위를 한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인도의 달릿 계급, 성차별, 환경문제 등이 다루어졌으나 아무래도 지금의 세계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 신자유주의와 이에 의한 지구화, FTA와 WTO 반대 등이 자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 모임에서는 결국 미국과 미국 대통령 부시 타도의 구호가 가장 많이 외쳐졌다.

22일에는 장창원 목사, 진관 스님, 박래군 동지, 이번에 사귄 김영곤 선생, 그리고 다산 인권센터회원 등 8명이 인도에서 제일 빈민지역인 달랑을 방문하기 위해 안내하기로 한 분을 기다렸으나 어쩐 일인지 그 분은 나오지 않았다. 그 분을 기다리던 중 마침 한국에서 3년 정도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인도 신부님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뭄바이의 안드레리 지역의 카톨릭 성신병원, 온갖 사회 복지 시설, 그 근처의 빈민촌과 빈민들을 위한 학교를 견학하였다. 우리는 설날을 알지 못하는 객지인 인도의 어느 식당에서 설날인 22일을 보냈다. 인도 음식을 먹으면서....

역시 인도에는 10억 명이라는 방대한 인구가 있는 만큼 그 많은 입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는 그저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이 제 일이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진관은 계속 깐디, 네루, 타골 등이 인도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빈정대었다. 그는 허울좋은 핵무기나 인공위성 따위가 아니고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사명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나는 석가모니나 불교가 인도사람을 위해서 뭣을 했는가? 라고 묻고 싶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을 말한다면 너무나 관심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한 곳 이상 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혹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폐막식을 20일에 내친김에 그 장소에서 했으면 생각해 보았다. 대회장소가 인도여서 돈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너무나 인구가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인 인도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 좋았다.

2005년 세계사회포럼은 첫 개최국인 브라질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가 주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곳이 어디일 것인가? 등등의 무거운 걱정을 안고 인천공항으로 돌아 왔다. 거기는 여름 같은 겨울이었으나 인천 공항의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회원탐방◆

김포농민회회장 최 병 종 회원

▶ 본인 소개를?
김포시 농민회 회장을 맡고 있구요,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이장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평통사 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아들 하나 있습니다.

▶ 김포 지역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김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쌀 문화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김포쌀은 일등미로 알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농토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공장들이 김포지역으로 계속 이전해 오고 있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포시 농민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농민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원들이 100명 정도 되구요, 회원 분포는 통진면, 월곶면, 양촌면에 거주하고 있고 김포시 농민회 사무실은 통진면에 있습니다. 농민회는 부회장과 사무국장, 총무부장, 교육부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체가 농사를 지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올해 회장을 맡게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포 농민회를 강화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해나갈 것입니다.

▶ 평통사는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농민회 단체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을 해왔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평통사 회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농업 문제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농민회 회원들도 틀림없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 함께 활동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유현리 이장을 하고 계시고, 농민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은?
사회단체들도 다 똑 같을 것입니다. 2003년을 보면 거의 100여일이 넘게 투쟁의 장으로 다녔습니다. 김포농업의 현실이 농민운동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민회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김포농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양촌면 이장단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장단, 영농회장, 마을 영농회 대표들 모두가 농민 운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 마을 이장들은 마을 영농회장이기 때문에 그 마을 영농회원 농업인들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고 농민회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포지역의 농민회 회원 정도는?
김포가 회원들이 없는 이유는 김포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전적으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겸업 농업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타 농촌 지역보다 많이 적습니다.

▶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농민회 활동 기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민회가 현재는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농민운동을 하겠다는 각오는 확실한데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과연 김포 농민운동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농업을 중요시 여기고는 있지만 농토가 없는 상태에서 농민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천평통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각오가 있다면?
먼저 평통사 운영위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회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통사가 확대, 발전됨으로써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포지역이 바로 북쪽과 맞닿아 있는데요 반공 이데올로기가 많은 지역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 졌습니다.
지난 수해 때는 북에서 내려온 소를 김포에서 건져서 소 이름을 평화의 소로 정하여 북제주군 위도에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 특성과 발전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김포, 강화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 평통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평통사 회원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7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터뷰 정리 | 장도정

◆회원글 1◆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 대한 실형 선고의 의미

평통사 홍보국장 공 동 길

지난 1월 9일 법원은 한강에 포르말린이라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대량 방류한 주한 미군속 맥팔랜드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실형 6개월을 선고하였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그간 대다수 주한미군 관련 범죄들이 면죄되거나 처벌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범죄를 방관해 왔던 법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검찰의 벌금 5백만원 약식 기소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500만원을 뛰어넘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실형 선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당국의 재판관할권 주장에 맞서 한국의 사법주권을 적극 수호하였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벌금 5백만원 약식 기소에 대해 예납까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맥팔랜드에 대한 공무증명서를 발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재판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처벌이 가벼우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무거우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장과 행태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SOFA 협정 제22조 제1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 하에서 합중국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 군속은 공무집행 중에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사건이 사실상 대한민국 당국에 제 1차적인 재판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벌금 예납으로 약식절차를 통한 사건의 종결을 도모하던 미군당국이 이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자 비로소 미군당국에 제 1차적인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미군당국의 주장은 그 자체가 사실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당국의 제 1차적인 재판권을 인정하여 그 결과를 수용하고, 정식재판이나 그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미군당국에게 제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판의 신속성이나 재판절차의 안정성 등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 용인될 수 없다.

이는 평화시 미군 군속 및 가족에 대해 공무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당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며, 주한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 발부와 재판 관할권 주장을 통렬히 비판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수호한 명판결이었다.

그러나 맥팔랜드에 대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되어있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규정 때문에 맥팔랜드를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당국은 여전히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맥팔랜드 개인 이름으로는 항소하면서도 이 항소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확정 판결로 인한 즉각 구속을 회피하고자 하는 교활한 술책이자,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국 사법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기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극복하여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2심과 최종심에서도 법원은 단호한 단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심에서의 추상같은 판결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며, 결국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우리 사법부가 철저히 농락 당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회원글 2◆

초를 다투는 실천과정, 새록새록 피어나는 서로의 애정들 *^ ^*

평화군축팀 부장 이 경 아

오전 9시 20분 현재...
보도자료 복사했나? 피켓은 다 만들었어?
그 외 실무준비를 점검하는 국장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오전 10시 국방부 앞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무실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한쪽에선 피켓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보도자료를 복사하고, 연사를 확인하고, 기자회견문을 검토하느라 눈코 틀 새가 없다. 서로 신경이 곤두서있다.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살얼음판이 되기 십상이다.
여유 있게 기자회견이 잡혀졌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바로 전날 기자회견이 결정됐기에 실무준비에 그만큼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조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평통사 본부 일꾼들의 기본 자세다.

오전 9시 30분...
서로 달라붙어 피켓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호는 맞지 않는다! 라며 수정하라는 주문이다. 이럴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 솔직한 기분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우리의 실천이 구호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어렵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실천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을. 급하게 수정작업에 들어간다.
보도자료, 피켓, 깃발, 깃대, 앰프 등 챙길 것은 다챙겼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문이 완성이 안된 것이다. 기자회견 시작 15분전인데…. 입술의 침이 마르기 시작한다. 할 수 없이 기자회견문을 가져올 사람을 남겨 놓고, 먼저 기자회견 장소로 향한다.
기자회견 장소인 국방부 앞에는 벌써 평통사 대표들과 지역평통사 회원들, 타 단체들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먼저 와 있다.

10시 5분 기자회견 시작
대표들의 인사말, 취지의 말, 규탄발언이 이어진다.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인데 기자회견문 도착이 안되고 있다. 사무실로 계속 전화를 돌린다.
출발했나요?, 그럼 몇 분 후에 출발 할 수 있나요? 5분 후에 출발한단다. 적어도 국방부까지 도착하려면 15분은 더 걸린다. 할 수 없다. 구호를 외치고, 규탄발언을 더 들을 수밖에. 기자들이 묻는다. 기자회견문은 없나요? 이어지는 규탄발언 중에 기자회견문이 드디어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자회견 시간을 넘기면서 촉박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비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담은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전날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 후 이를 다음날 아침에 검토보완한다. 내용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다 보면 시간을 넘기는 것은 다반사다.
피켓의 구호부터 기자회견문까지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본부 일꾼들의 노력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과정이 나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한 과정인 동시에 평통사 실무자라는 것이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한다. 선배들은 그것이 대중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한다.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이 끝났다.
아침의 한바탕의 전쟁이 종료된 것이다.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서로가 무용담을 나눈다.
기자회견문이 안 와서 혼 줄이 났다
그래도 훌륭했어!
아침에 칼날처럼 선 신경들이 조금씩 풀리며, 서로에게 농을 던지며 여유를 부려본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한 노력들이 모여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이라 확신한다.
새해에도 변함 없이 바쁘겠지만 동지들의 건강을 소망한다.

◆평화카페◆

<태극기 휘날리며> 21세기에 부활한 배달의 기수의 망령

서울 평통사 오 미 정

천만 명이 넘게 봤다는 <실미도>이후 무섭게 각종 기록들을 갈아엎으며 질주하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본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다. 쏟아지는 졸음을 감수하고 이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어디선가 주워 읽은 평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을 객관적으로 다뤘고, 특수효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배우들의 연기가 좋고.. 기타 등등. 쉬리라는 반공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라는 점이 좀 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단체 관람했다는 기사가 좀 걸렸지만.

전쟁의 아픔을, 분단의 아픔을 그려냈다고?
순식간에 쏟아지는 총알과 폭탄세례에 참혹하게 잘려나가는 팔과 다리들.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 튀는 살점,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상처.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총소리, 대포소리..(으아.. 다시 떠올리기 싫다.)
전쟁의 참혹성은, 2시간 반 동안 줄줄이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본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다. 코미디영화 <황산벌>에서의 정진영이 연기했던 김유신이 나이 어린 화랑들을 화살받이로 내모는 나나, 처자식을 죽이고 나온 계백이나 모두 미쳤다. 미친놈들이 하는 게 전쟁이다라며 일갈하는 게 더 낫다.

감독이 표현하는 역사인식은 낙동강에서부터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간 국군이 통일이다며 환호성을 지르다가 중국군 참전이후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군의 참전이 분단의 원인이라 규정짓는다. 세계 패권을 위해 우리 역사를 비틀어 놓고 현재까지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 장면,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할애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인민군이란 그의 전작 쉬리와 마찬가지로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살아남기 위해 비굴함을 위장하고, 살인본능밖에 남지 않는 악귀이다. (안 그래도 커다란 눈을 희번덕거리며 살인귀를 표현한 장동건의 연기는 칭찬할 만 하지만..)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은 빨갱이는 우리의 적임을 강변하고 있다. 백두산에도 태극기를 휘날려 보자는 국군장교는 감독의 대변자이다.

<실미도>를 보며 킁킁 냄새가 났던 이 불온한 기운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며 그 실체가 드러나는 듯 하다. 총알마저 빗겨 가는 감동적인 형제애를 표방하고 있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반공제일주의였던 과거로 후퇴시키려 작정한 불순한 영화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국방부 관계자들이 단체관람하고 감동받을 만하다.

영화관을 빠져나오며 웅성거리는 관객 틈에서 치 ~ 뭐 이래? 배달의 기수잖아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순간 영화를 보며 내내 꾸질꾸질했던 기분이 싸 ~ 해진다. 700만명이 봤어도, 전문적인 영화평론가들이 극찬을 해도 영화가 표현하는 진실에 대한 왜곡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 관객으로써 강제규 감독에게 던지는 쓴소리. 이상.

◆세상속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아저씨 밴드, 윤밴

부천 평통사 최 경 순

미군부대 옆에서 미군 군복을 다림질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집, 도시 영세민, 강원도 속초 과일가게, 경상도 농촌의 아들들이 모여 오랜 무명의 시간을 지내고 난 후 국민 그룹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 지고 있는 아저씨 그룹 윤도현 밴드. 아저씨 그룹 이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외모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예계의 비디오 스타들과의 차별을 짓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윤밴의 멤버들은 새로 영입된 한 멤버를 제외하면 모두 삼십대 중 후반 나이의 기혼자(아저씨)들로 이루어졌다.
무명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유와 평화, 분단의 아픔을 그린 노래들을 음반에 실어왔던 윤밴의 부천 콘서트.
효순이와 미선이의 넋을 기리는 노래인 [꽃잎]이 첫 곡으로 들어간 6집 앨범을 중심으로 꾸며진 콘서트의 1부에서 그들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래한 [이 땅에 살기 위하여]에 이어지는 노래 [죽든지 말든지] -우리 옆집에 아주 덩치가 큰 친구가 제 말 안 듣는다고 약한 앞집 친구를 두들겨 팬다… 덩치 큰 그 친구가 내게 소리치며 말한다. 머뭇거리는 내게 같이 패자 안 그럼 너도 죽을 줄 알어… 라는 가사의 전쟁과 파병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다- 를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담은 영상과 함께 부른 후, 연주하던 기타를 마치 미국의 패권주의인 듯 던지고 차서 완전히 박살 낸 후, 침을 뱉는 퍼포먼스. 이번 앨범에는 좀 더 강한 메시지와 강한 사운드를 담고 싶다고 하던 말 그대로의 무대 연출이었다.

락 음악은 본래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고정 관념을 깨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로서 시작되었다. 그런 락의 정신을 담고 한국에 전해 졌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락이 태동기에 불과하여 가사에 저항 정신을 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의 진보세력과 함께 대마초 사범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싹이 잘리고 말았다. 이후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는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한쪽은 오로지 연가만을 일색으로, 한쪽은 민중의 요구를 담고 있으나 그 기술력과 다양성은 크게 진보하지 못한 세월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통해 그 인지도를 전국민적으로 넓힌 윤밴은 대중적 인기와 관심 속에 여전히 평화와 자유와 분단의 아픔을 노래로 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나이 어린 가수들 보다 높은 열정으로 당당하게 반전을 노래하는 아저씨들의 공연을 보며, 그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나는, 그 열기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 윤밴의 음악을 알리겠다 다짐하는 (10년 후면 40대 중반일텐데) 그 치열함과 당당함.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게 되는 30 ~ 40대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세상을 바꾸어 갈 나는 아직 젊다. 세상을 바꾸어 가려는 당신도 아직 젊은이이다.

◆자료실 I ◆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 이전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

1.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의 굴욕성과 위법성

1) 이전비용의 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임.
① 이전비용 내역을 보면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대체시설을 제공. 심지어 영업권과 청구권까지 보상.
② 대체시설의 범위가 무한정. 사령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사, 배전,징수시스템,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등을 명시.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함.
③ 대체시설의 신축 및 개축을 미국 국방부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리나라에 강제. 보통 미 국방부 기준은 우리 기준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

2)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현 기지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위한 이전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는 없던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대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엿보게 하며 우리나라의 이전비용 부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대체토지와 대체시설들은 기존의 규모나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목적이 미국의 MD체제 구축, 대북한 선제공격, 중국봉쇄에 대비하여 새로운 첨단정보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데 있음을 의미함.
② 새로운 미군기지 기능을 위한 비용 부담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도 더 후퇴된 것이다.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도 기존 수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3) 비용 항목이나 그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든지 임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간의 정상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

2.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1) 이전비용이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①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91년 7월 17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불과 2개월 뒤에 95억 달러를 제시한 사실이나, 90년 합의 및 양해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있다ꡓ는 91년의 안기부 용산 기지 이전 대책 문건의 지적을 볼 때 30 ~ 50억 달러 추산은 지나친 낙관임.

② 정부 추산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임을 자인하는 것임.
③ 이 문서(90년 합의 및 양해 각서)대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며 용산기지의 반만 자르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MBC 2003년 10월 8일)는 워싱턴의 국방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는 이전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

2) 90년에 미국과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고,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빠져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임.
② 90년 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91년 SOFA 각서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강제에 의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임
③ 설령 90년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각서 제6조(수정)나 합의각서 제9조 (유효일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이전비용의 90% 현물지급, 집행통제 등의 주장의 허구성
①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를 한국이 현금을 주고 사야하므로 현물지급이나 현금지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없다.
② 모든 비용은 양 체결국에 의해 확인 비준될 것이며, 소파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화되고 집행될 것이다는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예산의 세부항목 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점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영업손실 보상, 청구권 등 90년 합의의 불평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의 허구성
미국 측 초안을 보면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표현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살아있다.